

< 법과 정치 >

이. 정치의 의미와 민주 정치의 발전

1.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행사, 국가 수준에서,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한 국가나 정부, 의회, 법률안 거부권
- 넓은 의미: 개인이나 집단 수준, 사회적 최소가치를 배분,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 설명 용이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 선거, 일반적 사회 집단, 구성원의 이해 관계 조정

2.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2-1)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 정치, 자유민인 자국의 성인 남성에게 시민권 부여, 제한적 민주 정치, 중우 정치
연회 (입법, 정책 심의, 공적 담당자 선출, 도편 추방제), 평의회 (행정 업무), 재판소
소규모 도시 공동체, 모든 시민에게 공적 참여의 기회 보장, 권력 분립 X
(사람 X)

2-2) 근대 민주정치: 시민 제국의 성장 (부르주아), 계몽 사상, 천부 인권설, 사회 계약설, 자유와 평등 이념 확산,
3대 시민 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봉건제 및 절대 왕정의 타도,
재산, 성별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 (보통 선거 X, 평등 선거 X), 차티스트 운동,
여러 가지 차별 철폐 운동, 간접 민주 정치 (국민의 의사 채택, 정치적 무관심...)
개인의 권리 우선, 입헌주의, 권력 분립, 대의제

2-3) 현대 민주정치: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 직접 민주제 요소 (초인 투표·발안·소환) 도입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국민 주권의 확대, 평등 선거

3. 사회 계약론자: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 개인 간의 계약, 자유주의, 개인 주의, 국가는 수단

3-1) 홉스: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으자 스스로 계약을 통해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를 형성, 모든 주권 양도,
자기 보존을 위한 불능적 욕구, 근주 주권 (왕권만수설)

3-2) 로크: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살인법, 재판관, 집행 권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함
생명, 자유 재산권을 보호받으자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 형성, 권력 분립 (이권 분립),
대의제, 저항권, 국민 주권, 인민의 정부 재구성, 개인의 권리를 일부 귀임 (특정 집단에 → 국가)

3-3) 루소: 개인의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해서 자연 상태에서처럼 자유로워야 함, 일반 의지에 의해
국가가 형성됨, 보편적 가치를 지님, 직접 민주제 옹호, 주권은 대표될 수 X (대리인)
국민 주권

02. 법치주의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1. 법치주의의 의미와 의의

- 1-1) 법치주의의 의미: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 국왕도 법 아래
- 1-2) 법치주의의 의의: 국가 기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

2. 법치주의의 유형

- 2-1) 형식적 법치주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따른 행정과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합법성 0, 정당성 X,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0, 합법적 득재의 수단, 기본권 제한 가능 (by 법령), 법에 의한 지배
- 2-2) 실질적 법치주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조, 인간의 존엄과 평등·정의의 실현을 목적과 내용으로 함, 실질적 정당성 확보, 거센 법률 심판 제도, 자연법 사상, 천부인권 사상, 법의 지배, 법에 의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X, 국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실질적 평등

03. 정부 형태

1. 정부 형태

- 기본 기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 1-1) 대통령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 견제와 균형, 입법부와 행정부를 엄격히 분리, 미국에서 시작,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X, 권력 분립, 의회 의원은 행정부 구성원이 될 수 X, 법률안 제출은 의회 의원만 가능,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의회의 각종 동의권 및 승인권. 탄핵 소추권 행사, 대통령 임기 보장, 법률안 거부권 (→ 의회 다수당의 횡포 방지), 대통령의 득재 가능성, 입법부-행정부 대립 시 조정 곤란, 여대야소 or 여소야대, 사법부의 독립 보장,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별도의 선거에서 선출, 의회는 국민의 투표로 구성, 여소야대일 때 법률안 거부권 발생 확률 ↑, 국정 의 연속성·안정성
- 1-2) 의원 내각제: 의회에서 내각을 선출,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성립,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 구성, 권력 융합, 입법부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의회 의원의 각종 결직 가능, 내각의 법률안 제출 가능,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내각의 의회 해산권, 국가 원수 (국왕,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실질적 권한 X, 행정부 수반 (총리)은 정치적 실권을 거짐, 능률적 국정 처리, 책임 정치 구현, 의회와 행정부의 정치적 대립 해결 가능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 다수당의 횡포 우려, 여대야소 or 단독 내각 or 연합내각, 사법부의 독립 보장, 의회 의원을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
- 1-3) 이원 정부제: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프랑스 정부 형태, 대통령 소속 정당 ≠ 총리의 소속 정당 시 동거 정부 수립, 평상시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나누어 가지지만,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행정권을 행사함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일부 도입
- 의원 내각제적 요소: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 의원의 국무위원 결직 가능,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04. 선거 ⇒ 선거구 20번 연습 꾸준히!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국정을 담당할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
- 선거의 기능: 대표자 선출, 대표자 및 정치권력 통제, 정치권력에 정당성 부여, 여론 반영, 국민 의식 함양

2.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2-1) 보통선거: 여러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X,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 제한선거)

2-2)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투표권 부여, 투표 가치에 차등 X, 표의 등가성 실현
(↔ 차등선거)

2-3) 직접선거 (↔ 간접선거)

2-4) 비밀선거 (↔ 공개선거)

3. 선거구 제도

3-1)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 선출, 다수당에 유리, 양당제, 선거 관리가 용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 용이
사표↑, 소수당이나 정치 신인의 의회 진출에 불리,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유권자의 정당 선택 불확↓

3-2) 중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자 선출,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유리, 다당제, 사표↓,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유리,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어려움, 근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발생,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소수의 이익 보호,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4. 대표 결정 방식 (상대적으로 수완 사용 설명 생략 → 다른 자료 활용)

4-1) 다수대표제: with 소선거구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 의회 다수당의 인정적 의석 확보에 유리, 소수 의견 무시
단순 다수 vs 절대 다수 (결선 투표 → 투표 2회 가능, 선외 투표 → 투표 1회)

4-2) 소수대표제: with 중대선거구제, 득표율로 2인 이상 당선, 소수당의 의회 진출과 다양한 의견 반영에 유리, 후보자의 선거 비용↑,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근소 정당 난립 → 정국 불안

4-3) 비례대표제: 정당의 유효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배분, 사표↓, 소수당의 의회 진출 유리, 정당 정치 구현, 근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 → 불내 조항 도입

5.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5-1) 대통령 선거: 5년 단임, 국민이 직접 선출

5-2) 국회의원 선거: 4년 중임 가능, 1인 2표 (지역구 - 단순 다수, 비례 대표 - 정당 명부식)

5-3) 지방 선거 (중도↓): 기초 의회 유원의 지역구 안 소수대표제, 교차감 - 정당 공천제 X

6.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6-1)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확보, 표의 등가성 실현

6-2) 선거 공영제: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 선거 비용의 원부를 부담, 선거 과열 방지 및 기리 보장

6-3) 선거 관리 위원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헌법상의 독립 기관, 각종 선거 관리 및 정당 정치 자금 관리

선거 홍보 및 제도 활동

05. 정당과 정치 참여

1. 정당: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1-1) 정당의 특징: 정권 획득 목적, 원자 공천, 공익 추구,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선거에서 공약 제시, 정치적 흥건 역할, 여론의 형성과 집약, 정치 사회화 기능 (공청회 등), 정부와 의회의 매개 (당정 협의회), 정부 견제, 정치 지도자 육성

2. 정당 제도

2-1) 일당제 (단일 정당제): 민주적 정권 교체 불가, 득재의 가능성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함

2-2) 복수 정당제 (양당제, 다당제): 유권자 선택의 기회 증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 → 국민 주권의 권리 실현

• 양당제: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 정국 안정, 강력한 정책 추진, 정치적 책임 소재 명확, 유권자의 정당 선택 용이,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곤란, 다수당의 횡포 (소수 이익 무시), 양당 간 대립시 중재가 어려움,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좁음, 과반 수 정당의 출현 가능성 ↑

• 다당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소수의 이익 보호, 정당 간 대립시 중재 용이,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넓음,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근소 정당 반립시 정국 불안정 우려, 의원 내각제 시 연립 내각 수립

3.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3-1) 이익 집단: 집단의 특수 이익 추구, 압력 단체, 특정 분야의 전문성, 정당 정치 (대의제) 한계 보완,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우려,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 받지 X, 정치 사회화 기능, 직능 대표 역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3-2) 시민 단체: 공익 실현이 목적, 비영리성, 비당파성, 이익 집단의 가능성 0, 국가의 재정 지원 받음, 대의 정치 한계 보완,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 행사, 공익 추구, 정치 사회화 기능 비권력성

06. 헌법의 의미와 기본 권리

1. 헌법의 의미

1-1) 헌법의 의미: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가 기관의 조직 헌리와 작용을 규정하는 국가 최고 법

1-2) 헌법 의미의 변화: ① 고유한 의미의 헌법 (국가 통치 기관 조직·구성, 이들 기관의 권한과 상호 관계 규정)

→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 (자유권, 기본권 보장, 국가권력 제한)

→ ③ 현대 복지 국가 헌법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 복지 국가의 이념, 권력 보전의 의무...)

1-3) 입헌주의: 헌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민주적 통치 헌리 규정,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인권 보장, 연주의 이념

1-4) 헌법의 정치적 의미: 국가의 창설, 정치 생활 주도, 사회 통합 실현

1-5) 헌법의 법적 의미: 최고 규범, 조직 수권 규범, 권력 제한 규범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권리

- 2-1) 국민 주권주의: 주권 (국가 의사 결정권) 이 국민에게 있음, 참정권 행사 (선거, 국민 투표)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복수 정당제, 권력 득점 금지, 정당성을 가지는 정치 권리, 재외국민의 대동령 선거권, 헌 1-①, ②,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와 정책 결정의 방향 제시
- 2-2) 자유 민주주의: 자유주의 + 민주주의, 개인주의,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 개인의 자유 존중, 국가 권력의 창출과 권력 행사의 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가져야 함,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권리, 권력 분립,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각종 기본권 보장,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2-3) 복지 국가의 권리: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사회 보장 제도, 최저 임금제, 소득 재분배 정책,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복지 국가 (현대)
- 2-4) 국제 평화주의: 세계 평화, 침략적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 국제 평화 유지 활동, 국제기구에의 참여, 기본권을 현저히 등등하게 보장하지는 X, 선전적 전쟁 금지는 X (방어를 위한 전쟁이)
- 2-5) 평화 통일 지향: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남북 교류 협력 추진,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권리
- 2-6) 문화 국가의 권리: 문화의 자율성 인정, 개인의 문화 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 배제, 의무·평생 교육,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함

07.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 1.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연법 사상 (헌부 인권설, 초국가적 불가침의 인권), 실정법 사상
- 2. 기본권의 종류

-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함, 헌법 질서 최고의 권리, 국가 권력 행사 한계, 물질적 + 정신적으로 안락한 삶, 모든 기본권에 적용, 포괄적, 기본권의 궁극적 목적
- 2-2) 평등권: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X,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기본권,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산술적 평등보다는 비례적 평등에 가까움 (차별적 대우를 인정)
- 2-3) 자유권: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 X, 소극적 방어적 권리, 포괄적 권리, 신체의 자유 (괴형 법정부의, 적법 절차의 권리, 고문 금지 및 묵비권, 영장 제도, 구속 적부 심사제, 형법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될 수 있는 권리,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정시되어서는 X, 근대적 의미의 헌법에서부터 보장 받음, 국가로부터의 자유
- 2-4) 참정권: 주권자,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통 선거가 특립되면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 능동적 권리, 선거권, 공무 부담권, 국민 투표권, 헌정적으로 세력에게만 보장, 국민 주권주의, 국가에의 자유
- 2-5)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실질적 평등, 자본주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 바이마르 헌법,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 가장 최근의 등장, 교육 받을 권리, 근로할 권리, 노동 3권, 환경권, 금부 요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함,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

2-6) 청구권: 국가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적극적 권리, 청구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3. 기본권의 제한 (과잉 금지의 원칙 적용)

- 헌 37-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0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1. 국회

1-1) 국회의 지위: 국민 대표 기관 (국민에 의해 선출), 입법 기관 (법률 제·개정), 국정 통제 기관

1-2) 국회의원의 구성

- 지역구 의원: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
- 비례대표 의원: 정당 투표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배정
- 상임 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여 심의
- 교섭 단체: 중요 안건 협의, 20인 이상

1-3) 국회의 회의

- 정기회: 매년 (회, 100일 이상)
- 임시회: 대통령 or 국회 의원 재적 1/4 이상 요구 →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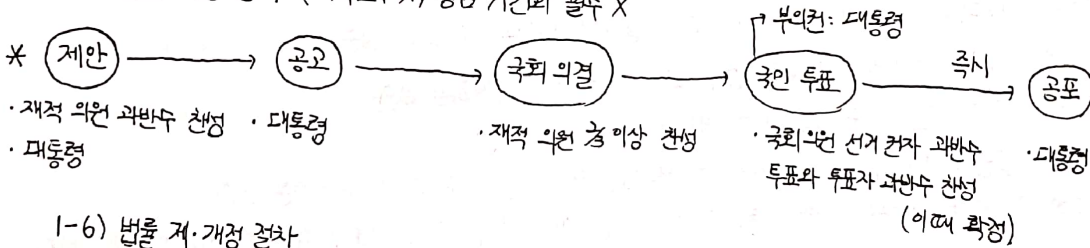
1-4) 국회의 기능과 권한 (국무 위원 선출 (의결) → 국회 등의 필요 X), 각료 경력 0 (의원 내각제적 요소)

- 입법: 헌법 개정안 제출·의결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등
- 국가 기관 구성: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 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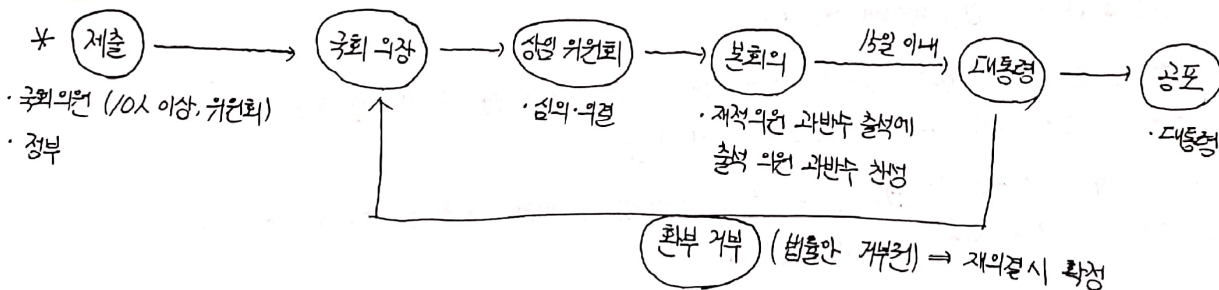
- 국정의 감사·통제: 국정 감사·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승인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회임 권역권, 제헌 해제 요구권, 탄핵 소추권 등

- 재정에 관한 사항: 국가 예산안 심의·의결권, 결산 심사권 등

1-5) 헌법 개정 절차 (재의요구 X, 상임 위원회 필수 X)



1-6) 법률 제·개정 절차



1-7) 의회주의의 위기: 행정부 권한 ↑, 국회 기능 ↓, by 행정 국회 현상, 정당 국가화 현상, 24시간제 권리 실현 X, 국회의원 전문성·기술성 ↓

2. 행정부와 대통령

2-1) 행정부의 주요 기구

- 대통령: 행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과 책임
- 국무총리: 대통령 부재 시 권한 대행,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좌, 행정 각부 총괄, 국무위원 임명 제청, 국무위원 퇴임 건의, 총리령
- 국무회의: 행정부의 최고 협의 기관 →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국무위원 ⇒ 대통령이 반드시出席하는 X
- 감사원: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 공무원 감찰, 회계 감사, 국가의 수입·세출의 결산 검사

국무총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위헌 내각제적 요소



2-2) 대통령: by 국민의 직접 선거, 임기 5년, 단임제 (강기 집권 방식)

조약 체결·비준권

- 행정부 지휘·감독, 국무위원 임명, 대통령령 발표, 대외적으로 국가 대표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권), 국장 소청, 헌법 기관 구성, 긴급 재청·경계 처분 및 봉쇄권, 긴급 명령권, 제정 선포권을 가짐, 임명권 (국회의장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X)
- 주요 국정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협의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자문 기관의 자문, 국회의 동의·승인
- 통제: 국회의 탄핵 소추·헌재의 탄핵 심판, 선거, 국회의 동의·승인

3. 법원과 헌법 재판소

3-1) 법원의 조직과 기능

- 대법원: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 및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상고심 관할, 선거 소송 (대통령·국회의원 등) 재판
- 고등법원: 지방 법원 및 자원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선거 소송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등) 재판
- 지방법원 및 자원: 제 1심 관할, 지방 법원 및 자원 단독 관사의 판결·결정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

3-2) 헌법 재판소의 구성

→ 9인의 재판관 (3인 국회의장,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대통령 지명)으로 구성,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3-3) 헌법 재판소의 기능

-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의 제청으로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공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
- 탄핵 심판: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주요 국무위원의 파면 여부를 심판 (⇒ 사면)
- 정당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해산 여부를 심판
-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3-4) 헌법 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 (상급 법원에 상소 X)

①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하기 전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기본권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함, 국민이 직접 청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는 X, 국민의 기본권 보장

* 위헌 심사형: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②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을 제청,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 상실

* 헌법 기관 파트 공부할 때 전체 주체와 대상 파악할 것.

09. 민법의 기초

1. 민법 :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사법(私法)

1-1)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 (by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 사유 재산권 존중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사적 지배권 인정, 국가 또는 타인이 제한 X
- 사적 자치(계약 자유)의 원칙 :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 형성
- 과실 책임의 원칙 :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권

1-2) 근대 민법의 원칙 수정·보완 : 소유권 절대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교체 X, 병존 O)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수정됨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제한 구역
- 계약 공정의 원칙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 현저하게 공평성을 잃은 계약 → 무효 (황권 계약 포함)
사적 강요 협박에 의한 계약 → 취소 O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만한 요건에 따라 관여되는 자가 손해 배상을 질 수 있음.
제조물 책임법, 공작물 소유자 책임, 횡령 고령 노인자에 대한 책임,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2. 계약 :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

-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 발생, 의무 불이행 시 손해 배상 책임이 따름
- 계약의 성립 시점 : 청약 + 승낙 / 공증 : 필요 조건 X but 집행력 있는 공증은 인사 재판 없이도 강제 집행 가능하게 함
- 계약서 : 계약의 필요 조건 X,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
- 의사 능력 X : 무효, 행위 능력 제한 (제한 능력자) : 취소 가능

3. 미성년자의 계약

3-1) 미성년자 : 19세 미만, 제한 능력자,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둘 다 취소 O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예 : 단순히 권리만을 행사하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피하려는 재산(음돈) 처분 행위

3-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 확답을 청구할 권리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청구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상관 X

• 철회권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거래 의사 표시 철회 O

단,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 철회권 X

• 취소권 행사 제한 : 미성년자가 신분을 위조하는 등의 속임수로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인계 한 경우,

(유효한 계약)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계 한 경우 취소권의 배제가 이루어짐

10. 불법 행위와 권리 구제

1.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1-1) 성립 요건

- 가해 행위: 피해자에게 가하는 가해자의 행위가 있어야 함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법질서 전체에 반하는 행위
- 손해의 발생: 정신적 손해도 포함
- 인과 관계
- 책임 능력: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대저 중.고등 ↑)

2. 손해 배상: 금전 배상이 원칙, 정신적 손해 배상 포함 (가자료)

3. 특수 불법 행위 (가찰로 익숙해지기)

3-1) 책임 우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의 법정 대리인이 배상. 과실 책임

3-2) 사용자의 배상 책임: 사유 집행과 관련되어야 함, 과실 책임, 피용자의 불법 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함, 피용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음

3-3) 공작물 점유·소유자 책임: 점유자 (차적 책임, 과실 책임) → 소유자 (과차적 책임, 무과실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어야 함

3-4) 동물의 점유자 책임: 과실 책임

3-5)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연대 책임, 자신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드러내야 함, 전액 배상 청구 가능

4. 간편한 민사 분쟁 해결 절차 (모두 필수는 X)

4-1) 내용 증명 우편 제도: 법적 분쟁에서의 증거 자료, 상대방에게 분쟁 해결을 촉구, 내용 그대로 법적 사실 관계 확증 X

4-2) 민사 조정 제도: 일방 신청 가능,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법적 효과를 거둠

4-3) 소액 사건 심판 제도: 3천만 원 이하, 자급적 회의를 통한 심리를 마침, 상소 가능

5. 민사 소송: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원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 형사 소송 (진술 거부권)과 달리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 있음

• 소 제기: 원고, 당한 사람: 피고

• 가압류: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

소송 시작 전에 가압류하면 구제의 실효성 ↑ (언제든지 가압류 가능), 채무자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 하는 것은 X

• 강제 집행: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 절차 없이 바로 강제 집행 가능

※ 채무 불이행 vs 불법 행위

• 채무 불이행: 당사자 간의 특별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에게서 귀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함, 예를 들어 중구집 오토바이 운반생과 고객은 계약의 양 당사자가 아니므로 약속 시간보다 늦게 배달되었다고 운반생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X

• 불법 행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해야 함 (한척)

11. 생활 속의 법

1. 가족 관계와 법

1-1) 혼인: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함

- 실질적 요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 혼인할 수 있는 연령, 혼인할 수 없는 친족 관계 X, 중혼 X
- 형식적 요건: 혼인 신고 → 법률혼주의 (X → 사실혼; 부부끼리 친족 X. 법적 상속분 X → 유류분 청구권 X)
- 법적 효과: 친족 관계 발생, 등거·접조·부양 등의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 18세 미성년자 성년취제 → 민법상 행위능력 0

1-2) 이혼: 법률혼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

- 협의상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이혼숙려 기간 →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 이혼 신고 (이혼의 효력 발생,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서 제출), 이혼 의사 합치
이혼숙려 기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지 X (미성년 자녀 0~3개월, X → 1개월), 법에 적힌 이혼 사유가 아니어도 됨
- 재판상 이혼: 법에 적힌 사유 0,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로 이루어짐, 법원이 이혼의 동기나 사유를 확인, 재판상 이혼 청구 → 이혼 조정 → 이혼 소송 → 이혼 판결 (이혼의 효력 발생) → 이혼 신고
- 법적 효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 (양쪽 모두 받음), 친족 관계 X, 면접 교섭권 발생,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 부부 재산제: 결혼 이전에 소유했던 큰 재산 (주택)은 배우자가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같이 행사할 수 없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큰 채무를 면제해서 배우자가 책임지지 X

1-3) 친자 관계 (상속시 모두 직계 비속에 속함)

- 친생자: 혼인 중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 혼인 외 (법률혼 관계 X, 친자 관계가 인정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함)
- 양자: 혈연 X, 친생자와 같은 자격을 가짐, 친부모·양부모 둘 모두의 재산을 상속
- 친양자: 혼인 중의 자, 미성년 자녀만 가능,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부모와 친족 관계 X, 면접 교섭권 X, 친부모의 재산 상속 X

1-4) 유언과 상속 (기출로 익혀두기)

- 유언: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 발생, 자필·공정·비밀·구수 증서·녹음, 조건에 맞지 않으면 무효
- 상속: 채무도 승계, 법정 상속 순위: 선순위 우선 (직계 비속 → 직계 존속 → 형제 자매 → 4촌 이내 방계 혈족), 법률혼 배우지만 0 같은 순위는 혼분 상속, 배우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분에 50%를 가산, 없는 경우 단독 상속, 이혼시 X
- 유류분: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 필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 (배우자·비속 → 1/3, 존속·형제자매 → 1/3) 법적 상속분 한도 내에서만 가능
- 한정승인: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상속포기: 권리, 의무의 승계 부인, 일정 기간 내에 가정 법원에 신청해야 함, 미성년자 단독 행사 X

4 2. 부동산과 관련된 법

2-1) 등기부: 누구나 열람 0, 표제부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급구 (소유권, 가압류, ~~채권·압착권~~), 은구 (전세권, 저당권 등)

2-2) 부동산 매매 (매도인-파는 사람 ↔ 매수인-사는 사람)

-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 증요금 지급 → 잔금 지급 → 등기 (이때 소유권 이전) (* 매수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매도인에게 등기를 받을 필요 X)
(계약금 필수는 X) → 특별한 약정 X
(일상 가사 X → 귀찮아 매리 계약 X) 일방적 계약 해제 { 매수인: 계약금 포기, 매도인: 계약금의 2배액을 상환 ⇒ 내용증명 우편 제도

2-3) 주택 임대차 계약: 사용·수익 0 / 처분 X (저당권: 사용·수익 X / 처분 0) 할 필요 X

- 대항력: 인도(입주) + 전입 신고 /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샀든 임대차 기간 동안 거주함을 주장 0
-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 일자 (등기부 X) / 우선권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선순위 우선 원칙)
- 계약 기간 원칙은 2년이지만, 임차인 마음대로 2년 미만 가능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
-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의 1/3을 가장 먼저 변제받음 (EBS 두루지 X)

12. 범죄와 형벌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1-1) 형법의 의미: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 (공법)

- 형식적 의미: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 "법률도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실질적 의미: 법의 명칭과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 기타 형사 제재를 정한 모든 법 규범, 법원의 자의적 판단 X, 입법부의 자의적 형벌권 남용 X, 현대적 의미,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1-2) 형법의 기능

- 보호적 의미: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알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여 국민들을 보호,
- 보장적 의미: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보장, 죄형 법정주의의 전제 조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1-3) 형벌 부과 효과 (생애에서 출제): 응보적 효과 vs 범죄 예방 효과

2.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함

2-1) 배경: 국가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형벌권의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2-2) 의미

- 형식적 의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형식적인 법률만 있으면 법률의 내용은 언제 삼지 않아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까지는 방지하기 어려움
- 실질적 의미: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법률의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강조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뿐 아니라 입법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 현대적 의미로 이해, 인권 보장

2-3) 내용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관습법 → 성문법)
-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하게 나타나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함
- 적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 소급효 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 가능)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직접 규정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된 법률 적용 X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유추 가능)

3.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기출로 익히기)

3-1) 의미: 형법에 의해 금지되어 형벌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

3-2) 범죄의 성립 요건 (구성요건 해석성 → 위법성 → 책임)

- 구성요건 해당성: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함 (죄를 살려 → 살인죄 X)
-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해야 함

위법성
조각 사유

- ① 정당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 X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절개하는 것)
- ② 정당 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강도의 폭격)
- ③ 긴급 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급한 피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술려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림)
- ④ 자기 행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하거나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 X

- 책임: 위법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 가능성 (책임 조각: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심신 상실자, 강요된 행위 등)
↳ 보안 처분 부과 가능 심신 미약자는 X
↓
의도적으로 야기한 경우
책임 조각 X

4. 형벌과 보안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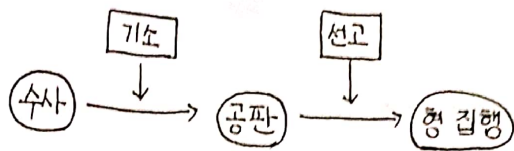
4-1)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몰수 (14세 이상)

4-2) 보안 처분: 대안적 제재 수단 사 범죄자의 사회 복귀, 사회 질서 보호 (치료 감호, 보호 관찰 수감 명령, 사회 봉사 명령) [14세 이상]

4-3) 소년법상 보호 처분: 형벌과 동시에 받을 수 X, 10세 이상 19세 미만, 선도에 초점, 전과 기록 X ↳ 후보수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경찰서장 →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호 (민사 절차와 별개)



1. 수사 절차의 이해

- 1-1) 수사: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 불구속 수사 원칙,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체포·구속 가능, 현행범이거나 범죄가 무거운 경우 영장 없이 긴급 체포 가능, 수사를 주재하는 검사와 수사를 하는 사법경찰 ↔ 피의자, 구속 영장 청구 → 검사
- 1-2) 수사 절차: 수사 개시 (고소, 고발, 현행범 체포, 자수, 인거 → 입건: 형사 사건으로 접수) → 수사 (정당한 사유 ○ 체포·구속·압수·수색 ○) → 검찰 송치 → 수사 종결 (검사의 송소 제기 or 불기소 처분)
 - ≠ 기소 유예: 기소를 이루는 것

2. 형사 재판의 절차

- 2-1) 기소 (공소 제기):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 2-2) 형사 재판의 절차 (원고 → 검사 vs 피고인)
 - 기소 (by 검사) → 재판부 구성 (경한 사건 → 단독 판사, 중한 사건 → 합의부) → 심리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논거 제시) ↔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 반박 → 선고 (유죄, 무죄 판결)

2-3) 형의 선고와 집행 (항소·상고 가능)

- 형의 선고 (by 판사)
 - 집행 유예: 형을 선고하되 즉시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미룬 → 일정 기간 동안 죄가 없으면 형 선조의 효력 상실
 - 선고 유예: 유죄, 형의 선고를 미룬 →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연속으로 간주
 - 형의 집행: by 검사
 - 가석방: 수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법원이 조건부로 석방
- ↓
둘 다 집으로 감 (석방)

3. 소년 사건과 국민 참여 재판

- 3-1) 소년 사건 (10세 이상 19세 미만): 처벌 < 보호 ⇒ 특별 조치 or 가정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게 함
 - * 항고, 재항고 ○ (결정하기 때문에)
 - * 형법은 14세 이상만 적용
-

- 3-2) 국민 참여 재판: 전과가 없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20세 이상 일반인,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피고인의 신청, (형사 재판만) 판사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양형 의견과 다를 경우 그 이유를 작성해야 함

4.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제도

- 4-1) 형사 절차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 (적법 절차 ~ 변호인의 조력은 형사 절차 모든 단계에서 적용)
 -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유죄 입증은 검사),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3선 변호인 - 필수 X),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영장 실결 심사, 검사의 청구·법원의 심문), 구속 적부 심사 제도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

4-2) 범죄 피해자 등을 보호

- 피해자 사망 시 유족이 권금 받을 수 ○
-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 but. 가해자로부터 피해 배상을 은연하게 받지 못할 때), 명예 회복 제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검찰청에게 무죄 재판을 법우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요청), 배상 명령 제도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으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인사적 손해 배상까지 받아냄)
- 형사 보상 제도 (피의자가 미결 기금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검찰청에, 피고인이 미결 기금되었던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에,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음)

* 미결 기금 = 구속 수사

14. 사회법

1. 사회법: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사적 자치가 핵심은 X (오히려 규제를 가함), 국가와 사회를 초월 X, 실질적 평등 구현, 물론 사적 자치의 권리 인정

1-1) 등장 배경: 근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의 빈민부, 독점 기업의 발생 해결, 사회·경제적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 (국가 권력 X)

1-2) 사회법의 종류: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2. 근로자의 권리 보호

2-1) 근로권: 근로 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가 근로할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2) 근로 3권

-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운영 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 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임금 인상 목적, 사용자의 적당 피해 대응
- 단체 행동권: 쟁의 행위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하면 인·형사상 책임 면제)

2-3) 근로 계약 체결 (by 근로 기준법)

→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가 제도,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 → 위반할 경우 해당 부분만 무효

↓
최저임금제

↳ 일반 (근로자: 1Day 8h, 1week 40h, 연강근로 (합의하에): 1week 44h, 하루 제한 X (12h)

↳ 개근시 임금 휴일 가능 * 휴게 시간: 4h 일 → 30min, 8h 일 → 1h

2-4) 근로 관련법

- 근로 기준법: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함, 근로 조건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 감독관을 둘, ↳ 비정규직도 보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 3권을 중심으로 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규제

2-5) 부당 해고: 정당한 해고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예 노동위원회, 해고 무효 확인 (민사 소송))

• 정당한 해고의 요건: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

2-6) 부당 노동 행위 (예 노동위원회 → 노동조합도 구제 신청 가능)

↳ 노동 3권을 어길 때 신청

해고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소송

↑

* 지방 노동 위원회 → 중앙 노동 위원회 →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행정 소송과 별개로 인사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가능

3. 경제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

3-1)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3-2) 공정 거래 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 심의·의결

3-3) 소비자의 권리: 안전할 권리, 알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3-4) 청약 철회: 소비자가 물품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손해 배상 책임 없이 의사 표시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

3-5) 제조물 책임: 무과실 책임,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함,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손해 발생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로 추정함

3-6) 소비자의 피해 구제 절차 (민사 소송은 별개로 제기 가능)

* 소비자 피해 발생 → 해당 사업자에 대한 보상 요구 (자율적 합의 good) →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및 위로

(중사자 간 합의 취소 → 미합의 시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조정 신청) →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 조정 성립 X → 소 제기 가능) → 민사 소송

15. 국제 사회와 국제 행위 주체

1.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1-1) 자유주의적 관점 : 보편적인 선, 국제 규범, 국제 기구, 국제법, 집단 안보 체제, 계몽주의가 배경, 국제 사회가 협력, 배려, 양보, 이성과 보편적 윤리, 국가는 규범적 판단이 가능, 평화, 다협

1-2) 현실주의적 관점 : 힘의 논리, 자국의 이익 추구를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 세력 균형, 상호 의존성 경시, 힘의 인간관 복잡한 국제 관계를 정치적 권력 관계로 단순화, 무정부 상태, 근세 강쟁이 국제 평화를 위협함

2. 국제 사회의 형성과 변화

• 베스트팔렌 조약 (1648, 민족 단위의 독자적인 주권 국가 등장) → 제국주의 시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 창설)

→ 전체주의 등장 (제 2차 세계 대전 → 국제 연합 창설) → 양극 체제 (자유 vs 공산, 이념 및 체제 경쟁) → 다극 체제 (냉전 후드권)

→ 생존 경쟁 (소련 해체, 이념 대결보다 자국의 실리 추구가 중요, 국제 분쟁 요인의 다양화)

3.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3-1) 국가 :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 주권 보유

3-2) 초국가적 행위체 : 국경을 넘어서 영합적 행사, 정부 간 국제기구 (세계 무역 기구, 국제 연합), 다국적 기업, 비정부 국제 기구 (국경 없는 의사소, 국제 사면 위원회)

3-3) 국가 내부적 행위체 : 한 국가의 일부이지만 국제적인 영합력을 행사, 지방 자치 단체, 소수 인종 및 민족

4. 국제 연합 (UN) :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강대국이 주도하고 신생 독립국들이 참여

4-1) 총회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 형식상 최고 의결 기관, 13표 적용,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 선출, 주권 평등의 원칙

4-2) 안전 보장 이사회 :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목적, 분쟁 당사국에 평화적 해결 권고·경제 제재·군사력 사용, 13표, 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 (실질 사항의 경우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 부여, 현실주의적 관점, 상임 이사국의 안장 일치 필요), 실질적 의사 결정 기관, 직접 제재 0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 강대국의 힘의 원리

4-3) 국제 사법 재판소 : 국제법으로 해결, 직접적인 제재 수단 X, 총회와 안보리에서 3국이 다른 5명의 재판관 선출, 분쟁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관해서만 관할권을 가짐 (개인 X, 국제 기구 X)

16. 국제법과 국제 분쟁

1. 국제법의 종류 (법원) :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의 근거로 사용됨, 권위적인 제정 기구 X

1-1) 조약 :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 국제기구 상호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명시적 합의, 우리나라의 경우 조약 체결 및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조약에 관한 동의권은 국회에게 주어짐,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봄, -조약, -의정서, -협약..., 헌법보다는 낮은 지위를 가짐, 문서 형식의 합의가 일반적,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국 간에만 법적 구속력 발생

1-2) 국제 관습법 : 국제 사회의 반복적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 포괄적 구속력 (별도의 체결 절차 X), 국내 문제 불간섭 등, 국제 사회의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

1-3) 법의 일반 원칙 :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국내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 국제 분쟁 해결 시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의 근거로 활용,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국제 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보편적 내용은 기반으로 함, 포괄적 구속력

1-4) 기타 : 판례, 학설

2. 국제법 vs 국내법

2-1) 국제법 : 당사국 간의 합의, 다수 국가 사이에 적용, 국가 상호 관계 혹은 국제기구 등을 기원, 중앙 정부 X → 강제 집행 곤란, 구속력 ↓, 위반 시 제재 곤란

2-2) 국내법 : 권위를 가진 입법부의 제정,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 적용, 구속력 ↑, 제재 용이